광주 5개구 재정난 대책 없나

예산 절감·재산 매각 한계 결국 市에 손 벌릴 수밖에

직원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난에 봉착한 광주시 각 자치구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체납세 징수와 구 소유 재산 매각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결국 광주시에 손을 벌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주시 역시 긴축재정에 들어갈 만큼 여유가 없어 자치구들은 지방채를 발행해 '빚 잔치'를 하거나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우려하고 있다.

채무 264억…市 재정도 악화 지원 어려워

경상비 명목 지방채 발행도 못해 '죽을 맛'

◇돈 나올 곳 없는 자치구=광주지역 5개 자치구의 부족예산은 모두 1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당장 급한 예산만 800억원 정도이며, 남구가 270억원으로 가장 많다. 광산구는 214억원, 동구 177억원, 북구 170억원, 서구 115억원 등이다.

자치구들이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은 체납세금 징수 및 신규 세원 발굴, 예산 절감, 구 소유 재산 매각 등이 있다. 동구청은 지난해 남은 예산 60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중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 남아있는 40억원의 반납을 연기해 급한 불을 끌 예정이다.

서구청은 지난해 매각에 실패한 서구 서창동 밭과 임야 9필지(1만2475㎡)를 다시 시장에 내놓고, 남구청과 북구청·광산구청은 사업 취소 및 축소, 체납세금 징수 등을 통해 '재정난' 타개를 모색하고 있다.

가장 상황이 심각한 남구청은 하반기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재검토에 들어갔으며, 구 소유 재산 매각 등 갖가지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구들은 이들 대책이 모두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고 광주시에 100억원 이상의 재정지원보전금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청 관계자는 "조만간 구청장들이 5개 구청장들이 모여 광주시에 부족재원을 지원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라며 "대부분 사회복지 및 대민사업을 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예산을 절감할 대상이 없으며, 체납세금 징수도 할 만큼 했지만 위기를 극복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빚 낼 수도 없는 처지=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5개 자치구 채무액은 동구 38억원, 서구 57억원, 남구 82억원, 북구 31억원, 광산구 56억원 등 모두 264억원이다. 아직까지 부채 규모는 작지만,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추세가 앞으로 계속될 경우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

또 인건비나 시설 운영비 등 경상비 명목으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자치구들은 빚도 내기 어려운 처지다. 또 부족한 예산은 대부분이 인건비 등 경상비여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거나 광주시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의 재정형편상 자치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어렵고, 지원을 한다고 해도 요구액의 10%도 안 되는 수준일 것"이라며 "자치구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자구책을 수립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방책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젖먹던 힘까지 14일 광주시 북구 무등경기장에서 광주시 소방공무원 실기시험에 응시한 95명이 20m 왕복달리기를 하고 있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28일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시 등 전국 6곳 '제2의 성남시' 우려"

현대경제硏 "최근 4년 채무상환비율 10% 넘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광주시의 최근 4년간 채무상환비율이 10%대를 넘어서 지방재정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연구위원은 14일 '민선 5기의 지방재정 건전화 5대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의 자료를 인용해 채무상환비율이 최근 4년간 10%를 넘은 지자체가 광주시를 비롯해 모두 6곳이라고 밝혔다. 채무상환비율은 지방비로 상환한 채무액이 일반재원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광주시의 채무상환비율은 11.36%였으며, 부산 11.85%, 대구 13.42%를 기록했다. 기초지자체에서는 성남, 속초, 시흥 등 3곳이 10%가 넘었다.

김 연구위원은 "판교신도시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자금과 관련해 '모라토리엄(채무상환 유예)'을 선언한 경기 성남시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4년간 채무상환비율이 10%를 넘거나, 향후 4년간의 채무상환비율이 10%를 넘을 경우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큰 만큼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들 지자체의 재정악화 이유에 대해 ▲지자체장이 선호하는 행사나 축제성 경비가 결산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0.48%에서 2008년 0.61%로 커지고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이전 경비 비중도 같은 기간 3.12%에서 5.12%로 커지는 등 선심성 예산이 증가한 것을 이유로 꼽았다.

이와 함께 ▲조세탄력성이 작은 재산과세의 비중은 46%로 높은 반면 지방세와 국세의 예산대비 비중은 각각 34%와 21%에 불과해 지자체의 재정확충 및 건전화의 유인이 부족하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38.9%에 이르는데다 인건비 등을 합하면 예산대비 50%에 이르는 경직적인 세출구조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방채 발행 관리가 소홀하고 재정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지방재정을 악화시켜온 요인으로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지자체의 재정 조기경보시스템을 만들고, 지방채에 신용등급을 부여해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며 "특히, 현재 21.4%로 선진국보다 한참 낮은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을 높여 재정 자립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빚없는 지자체도 있네 완도군 지방채 3억5천만원뿐

일부 자치단체가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빚더미에 앉는 등 재정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가고 있는 가운데 완도군의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현황이 눈길을 끌고 있다.

완도군은 14일 재정운용 자료를 배포하고 "지방채 규모가 3억5000만원에 불과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도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완도군에 따르면 지방채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117억5000만원 규모였지만 민선 3·4기 김종식 군수 취임 이후 지방채 발행을 배제하고 운용 가능한 예산의 범위에서만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라 단 한 푼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동안 114억원을 상환해 현재 3억5000만원의 지방채만 남아 있다. 또 남은 지방채도 조기 상환할 방침이어서 부채 없는 건실한 자치단체가 될 전망이다.

군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전복과 구절초를 활용한 산업화 사업 등 중앙 부처 공모사업과 상사업비를 확보해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특별한 자립재원이 없는 자치단체로 90% 이상 중앙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지만,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중앙정부의 공모 사업 등을 통해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국토부 "성남시 지급유예 상황 아니다" 성남시 "판교에만 예산 투자할 수 없다"

경기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5200억원을 LH 등에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고 지급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한데 대해 국토해양부는 "지급유예할 상황이 전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성남시는 그러나 "모든 예산을 판교에만 쏟아부을 수 없으며 내년부터 3년간 매년 1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500억원씩 현금을 대 이전 집행부가 전용한 특별회계를 메우겠다"고 밝혀 중앙정부와의 마찰을 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어제 오후 판교 신도시 조성 사업을 해온 경기도, 성남시, LH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의 발표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한 결과, 성남시가 연말까지 LH 측에 정산할 금액은 공동공공시설비 350억원에 불과한데도 사실을 왜곡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성남시가 공동공공시설비와 관련해 LH에 줘야 할 금액은 개발이익과 지분율 등을 고려할 때 최소 350억원에서 최대 1800억원으로, 이 가운데 350억원을 연말까지 정산하면 되고 나머지는 알파돔시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자비용을 포함해 정산하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에 700억원의 잔액이 있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 지급유예 선언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자체 계산한 결과, 공동공공시설비 2300억원 중 연말까지 LH에 정산할 금액이 1400억원이며 국토부가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5400억원을 당장 채워넣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급유예를 선언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올해 예산 상황으로는 LH에 정산할 여력이 없고 세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 내년부터 매년 1000억원 이상을 판교 신도시 사업에 재투자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